

미래 안보이는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 주요 당직에 측근 임명...최고위 당권파 확대 바른정당계 "절차 무시" 집단 반발...긴급 최고위 소집 요청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강행한데 맞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내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

손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조선 비례대표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경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석인 수석대변인에는 역시 조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이 선임됐다. 김 대변인은 "손 대표는 당헌 22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통인 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진작 생각하고, 사무총장은 사무처 당직자로 사무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임 의원을 임명했다. 최 의원은 많이 사양했지만 지금 원내 의원으로 (수석대변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명된 고위 당직자들은 '친(親) 손학규'로 분류되는 인사다. 특히 '당연직 최고위원'에 포함하는 정책위의장에 손 대표 측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최고위에서 기존 3명이던 당권파를 4명으로 늘렸다. 이로써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은 당권파 4명 대 안철수·유승민계로 구성된 퇴진파 5명의 구조로 바뀌었다.

바른정당계는 집단 반발에 나섰다. 오신

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채 의원은 당 내홍을 일으킨 사보임 당사자"라며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바른미래당을 혼자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지난 1일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을 지명할 때도 최고위에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 소집 요청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4월 이후 손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2인(주승용 의원·문병호 전 의원)과 정책위의장·사무총장의 임명이 "최고위와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철회를 요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에 규정된 최고위의 '협의'라는 단어 뜻을 '의결 정족수 이상 참석할 회의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의혹', '박지연 민주평화당 의원

의 '손 대표의 유승민 축출설' 등에 있어 조사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가 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됐지만, 다수 최고위원이 요구하는 안건을 당 대표가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위 소집 요청과 관련한 당헌에 따라 손 대표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4·3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두 달째 이어지는 내분에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식물정당'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패스트트랙 파동 이후, 당을 추스리고 제3당으로서 향후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어야 하는데 당 내분으로 역량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 보수와 중도 개혁 진영으로 나뉜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 23일 봉하 대집결

노무현 전대통령 10주기 추도식...부시 美 전 대통령 참석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다. 20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번 추도식에는 참여정부 인사들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현직 의원들, 청와대 및 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현직의원 50여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렀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임재정 전 국회의장 등도 자리한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당시 환경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전 총리, 장하진·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강기정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부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준비해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49.4%

리얼미터, 민주 42.3%·한국당 31.1%...11.2%p 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오르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20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5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42.3%로 지난해

10월 3주차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3.2%포인트 내린 31.1%로 지난 4주간의 상승세가 꺾였다. 하락 폭은 '5·18 망인' 여파로 2월 1주차 28.0%에서 2월 2주차 25.2%로 3.7%포인트 하락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 시범지역 확대

당정청 경찰 개혁안 발표 정보경찰 정치 관여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오른쪽 두번째)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맨 왼쪽)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또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 수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조 의장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수

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상 병역 특례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송갑석 법안발의·예산확보 '종횡무진'

11개월간 52건 대표발의...의정활동 '호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활발한 입법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지난해 6·13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개월 동안 5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호 법안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뒷받침할 '남북관계 7법'을 시작으로 대기업 갑질 금지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4법',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세감면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광주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및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등을 위한 '5·18 바로세우기 5법',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지원 금융 대책 3법' 등 국가적 과제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지역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

다.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과 광주형 일자리 마중물 예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비 증액 등을 놓고 정부와 막판 줄다리기를 통해 모두 반영시키는 목표를 보였다.

송 의원은 올해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서 지역 현안 반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및 올 3월에는 각각 40억 여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서구 현안 사업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광주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예결소위에 들어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46.4㎡(1587평) 매매가 : 63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무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남구 봉선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405㎡(122.51평) 건물 : 551.94㎡(166.96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8억5천 현 교회이용중, 상가 다가구 이용가능.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병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양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만매각.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억8백4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억2천6백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14억5천3백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북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56%) 1억8백3십6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